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학교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성 명	이정현
연구 자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박용철)			
연구 기 간	2023. 11. 6. ~ 2024. 7. 5. (8 개월)			
연구 금 액	금 삼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input type="checkbox"/>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회 공고 후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연구결과	○ 외국 주요국의 학교폭력 가해자 및 감독자에 대한 처벌 또는 책임 규정, 행정절차상 조치나 각종 징계, 제재 등의 내용, 실제 처벌 또는 적용 사례의 비교 및 검토 ○ 위 각 법규정의 연혁, 법적 쟁점과 효과에 대한 평가 및 검토 ○ 국내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시			
연구 결과물 제출일	2024. 7. 19.			
평가항목	상	중	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			
내용의 완결성		○		
구성, 체제의 적정성		○		
참고문헌의 충실도		○		
학술적, 실무적 가치	○			
제출기간 준수			○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평가 결과 총평	별지와 같음			
공개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input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2024. 10. 28.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총평

- ◎ 아래와 같이 본 정책연구용역은 학교폭력범죄에 관한 외국 주요국의 처벌 및 책임 규정과 각종 징계, 제재 등의 내용 및 연혁,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실제 처벌 사례 등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그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향후 국내법의 제·개정이나 제도 마련, 법원의 재판실무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외국 주요국의 학교폭력범죄 관련 규정 검토

■ 주요 내용

- 외국 주요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의 학교폭력범죄 관련 현황과 각종 법규정의 입법 배경, 법규정의 전제가 된 정책 이념 등을 소개함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은 직접 행위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규정하는 대신 각 주에서 각종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또는 독려하는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각 주에서 법령(일명 따돌림 방지법)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일부 주에서는 가해자의 부모에 대한 형사상 처벌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22년부터 학교폭력척결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강력한 규정임. 이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저해한다는 등의 비판도 존재함
-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법규는 없고,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음. 다만 최근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형사책임 연령에 관한 규정을 일부 하향 조정하여, 가해자가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고의적 살인 등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임

(2) 국내법의 제·개정, 재판실무 등을 위한 시사점

■ 주요 내용

- 외국 주요국의 경우 학교폭력사건에 관한 처벌 등 처리에 있어서 개별 교육기관, 즉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처리기간도 제한하고 있음. 이는 사건 및 당사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장의 책임 하에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우리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과 차이나는 부분임
- 우리의 경우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폭력에까지 이르지 않는) 따돌림 행위에 관한 형사처벌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나,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이에 관하여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교화를 포기하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으나, 학교폭력의 경우 경미한 반복적 행위로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임
- 외국 주요국에서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게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반면 우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들의 위와 같은 정책 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용역수행 과정에서 제출기한 미준수, 보고서 초안의 완성도 부족(검토 및 결론 부실, 참고문헌의 인용표시 미흡, 오타 등), 반복 수정 등의 문제가 있었음